



김영록 지사가 3일 서울 국회 박동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 남중권의 역할' 포럼 행사에서 내빈 및 참석자들과 COP33 유치 붐 조성을 위한 포퍼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도, 기후 대응·COP33 유치 의지 '후끈'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회서 포럼...대한민국 탄소중립·남해안남중권 역할 모색
김영록 지사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탄소중립 실천"

전남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의지를 다졌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박동관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 남중권 역할'을 주제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전남도와 여수시, 국회의원 12명(서영교·이개호·송옥주·주철현·민형배·임오경·조계원·김문수·권항엽·문금

의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남해안 남중권의 필요성 등 포럼 주제에 깊은 공감의 견해를 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석좌교수와 오성남 숭실대 특임교수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윤원태 전남도교육청 ESG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연희 이틀레이 한국사무소장, 이종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김민영 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이사장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남해안 남중권의 역할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해상풍력·태양광 발전단지와 RE100 산단 구축 등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연안 생태계 보전과 기능 회복에 앞장서고, COP33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당당한 선진국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남해안남중권 자치단체와 전남, 경남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반드시 유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김영록 지사 현안 예산 건의
한병도 예산결산위원장 면담
균형발전 인프라 추진 강조

마케팅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2026년 마스터플랜 수립비 1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 첨단 축산업을 선도할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벨리' 사업은 정부 차원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원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민간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구축(20억원), 여수산단 폐찌꺼기를 활용해 수소·일산화 탄소 생산하는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40억원) 예산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 5·18기념관과 커뮤니티센터 조성 기본·실시설계비(5억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유치(10억원), 전남 갯벌생명관 기본설계 용역비(9억원), 신안 예곡섬 내륙연안습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13억원)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한병도 위원장은 "전남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남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객선 공영제는 국가 책무...정부 적극 나서야"

서삼석, 국회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 위한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3일 국회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호 한국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와 학계, 여객선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하고, 해양교통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만 받아서는 안된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가가 책임지는



의 행복추구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섬 주민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고,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신속추진 민생법안으로 채택된 만큼 조속히 실현해 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으로 세심히 챙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과 여객선 도입의 국가 지원을 명시한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외국인 유학생 광주 대학생활 적응 지원

시, 24일 분야별 전문가 교육

광주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적응 돕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지역대학 유학생들이 지역 생활과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 어때! 광주 처음이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광주생활 안내, 광주 주요 관광지 소개, 외국인 유학생 우수 활동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되며, 분야

별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맡는다.
교육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재학 중인 대학이나 온라인 구급품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의 초기에 지역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유학생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며 "광주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하고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2024년 기준 6339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광주시는 유학생 서포터즈 운영, 유학생의 날 개최, 외국인 유학생 지원계획 수립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어업인 맞춤형 정보 플랫폼 도입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어업인들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다.
3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일 민간 해양정보 앱 분야 선두주자 '바다타임'을 운영하는 ㈜인터버드와 어업인 맞춤형 해양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바다타임은 1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해양정보 서비스 앱이다. 전국 1400여 지역의 물때표, 조석예보, 바다날씨 등을 제공하며, 기상청·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110개소)의 수온관측망을 구축한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인터버드가 손잡고 어업인과 일반이용자에게 신뢰성 높은 해양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렬 기자 holbul@

신고전화 국번없이 1332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지급

보험사기, 순간의 실수, 평생의 후회

"보험사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가벼운 판단이, 무거운 처벌로 되 돌아옵니다.

최대 징역 10년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는 단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범죄입니다.

■ 허위 입원 / 허위 진단서 ■ 간병비 부풀리기 ■ 도수치료 기강한 미용시술 ■ 고의 사고 ■ 과장된 수리비 청구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